



의안번호	제62호
------	------

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17. 9. 8.

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62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9. 8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 일자리창출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함으로 탈 빈곤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
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 평가 : 원안동의
- (2) 성별영향 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- (가) 예고기간 : 2017. 8. 8. ~ 8. 29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(041-635-2613)

(7)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완료: 2017. 5. 24.~ 5. 25.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
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2조 중 “2017년”을 “2022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주민생활지원과장	김 종 철
	의 료 자 활 팀 장	성 경 옥
	담 당 자	김 수 연 (746-531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칙 제2조(존속기한) 이 조례는 <u>2017년</u>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	부칙 제2조(존속기한) <u>2022년</u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부칙제2조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2. 비용추계결과

- 2017년도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발생으로 추계
 - 100,000원 × 11명 = 1,100천원/년간
 - 1,100,000원/년간 × 5년 = 5,500천원

3. 작성자

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철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: 천 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세 입							
시 비							
세 출							
201-01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수당		1,100	1,100	1,100	1,100	1,100	5,5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